

# 민주당 '윤미향 의혹' 오늘 입장 표명

### 지도부 '아파트 구입 자금 등 사실 관계 확인 우선'

### 통합당 국조 주장... 윤 당선인 "의정활동으로 평가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한 대표가 20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뇌관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윤 당선인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아파트 구입 자금의 흐름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과정에 불거진 의혹이 제대로 설명되는지도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된 술한 의혹이 시민사회 단체 운영과정의 '부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윤 당선인 개인의 아파트 구입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미향 이슈가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한 대표도 윤 당선인 측의 해명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르면 20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다른 최고위원은 이날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지만, 당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에게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당사자들이 분명

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어제 합당 신고로 윤 당선인이 민주당 소속이 됐으므로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 20일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브리핑에 참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전날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엄중하게 보

고 있다"는 발언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에선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핵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에서 의원직 사퇴를 뜻하는 자진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윤 당선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스스로 당선인 신분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성

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윤미향 국정 조사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성사되면 2016년 11월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야권의 군소정당과 공조해도 과반이 안 되는 의석 수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당이 윤 당선인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카드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장 '합의 추대론' 부상

### 민주당 박병석·김진표 단일화 논의... 오늘 후보 등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합의 추대론이 나오고 있다.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의원과 5선의 당내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밤에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고, 이들 의원은 19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19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장 단 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경선은 오는 25일 실시된다. 의장 후보 경선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양자 대결로 굳어진 상태다.

두 의원은 일단 후보등록이 시작된 19일 등록을 보류하고 협상과 함께 당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단만은 합의를 통해 추대자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내상을 입고 잡음도 불거지는 게 불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양보로 전반기를 맡고 김 의원이 후반기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내 5선 의원이 다수라서 김 의원으로선 후반기 의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한편 의장 등록과 같은 기간 민주당 룩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록도 진행된다. 부의장 경선 후보로는 이상민·변재일·설훈·안민석(5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의원들이 추천한 김상희(4선)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태년 "전두환 사후에도 재산 추징"

### 민주 원내대표... "5·18 진실규명법 등 법제화 속도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전두환씨 사후에도 추징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을 때, 전두환 씨는 대리인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표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두환 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이다. 또한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 5.18 북한개입설의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학살의 책임

자들이 끝까지 죄를 부정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전두환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 필요하다면 전 씨의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 진실을 고백할 때만 진실과 화해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전두환씨는 더 늦기 전에 당시의 재단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과거사법 '배·보상 조항' 빼고 개정안 처리

### 오늘 20대 마지막 본회의... 전자서명법 등 100여건 처리

여야가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과 코로나 19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지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 법안들 중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과거사법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하고,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을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정쟁이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빼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 이를 토대로 배상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원내관계자는 "배·보상 조항은 줄속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정점 민생법안 100여건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 시키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일부 코로나19 관련 법안의 처리는 어려운 전망이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가 총선 낙선·낙선 의원들이 많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통합당, 보수재건 시동

### 내일까지 의원 연찬회... 김종인 비대위 수용 여부 등 결론

주호영 원내대표의 5·18 과거 망언 사과로 세인의 첫걸음을 댄 미래통합당이 보수 재건 노력을 본격화한다.

통합당은 2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과거와 달리 외부 강사 없이 진행된다. 오전 10시 시작해 84명의 당선인끼리 끝장토론으로 현안별 결론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토론 주제는 4·15 총선 참패 진단과 김종인 비대위 수용 여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등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외부 강사를 데려와 오래 까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단체 사진을 찍고 끝나선 안 된다"며 "소주제별 난상토론을 벌여 84명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이 예상되는 김종인 비대위 문제는 연찬회 둘째 날 집중 토론으로 다뤄진다. 비대위원장으로 추진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측은 해체 수준의 당 개혁과 인적쇄신 등 정권전환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충분한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선 임기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1년간", "대선후보 선출 전까지" 등 각종 제안이 나온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